

제31차 여성정책포럼

5. 31 지방선거와 여성

일시 : 2006년 6월 13일(화) 14:00 ~ 17:00

장소 : 한국여성개발원 본관 국제회의장(2층)

한국여성개발원

행 사 일 정

14:00 ~ 14:30 등 록

14:30 ~ 14:40 인사말 서 명 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14:40 ~ 15:10 사 회 김 영 옥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주 제 5.31 지방선거와 여성
 발 표 김원홍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윤덕경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은경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15:10 ~ 16:30 지정토론 김 유 임 (열린우리당 경기도고양시장 후보)
 조 양 민 (한나라당 경기도 도의회 당선자)
 장 우 윤 (열린우리당 은평구 의회 당선자)
 이 성 심 (민주당 관악구 의회 당선자)
 최 선 (민주노동당 강북구 의회 당선자)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 봉 협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16:30 ~ 16:40 휴 식

16:40 ~ 17:00 종합토론

17:00 폐 회

5. 31 지방선거와 여성

- 김원홍, 윤덕경, 김은경

< 목 차 >

I. 서 론	1
II. 2006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2
1. 2006 지방선거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현황	2
2. 여성후보의 당선율	3
3. 정당별 여성당선자 현황	5
4. 주요정당의 16개 시도별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6
5. 2006년 지방선거와 선거제도의 변화내용	9
III.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정당·정부·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 활동	2·1
1.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2
2.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6
3. 여성가족부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8
IV.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12
1. 정당의 역할	2
2. 여성가족부의 역할	8
3. 여성단체의 역할	2
<참고자료>	28
<외국사례>	29
1. 프랑스	29
2. 스웨덴	29
3. 영국	30
4. 대만	31

<표 목 차>

<표 1> 2006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현황	2
<표 2> 2006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	3
<표 3> 2006 지방선거 여성후보자의 당선율	4
<표 4> 1995·1998·2002·2006 지방선거의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4
<표 5> 2006 지방의회 정당별 여성 공천자 및 당선자 현황	5
<표 6>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7
<표 6-1>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7
<표 7>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8
<표 7-1> 기초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9
<표 8> 2006 기초의회 선거구 현황	1
<표 9> 여성정치대학 연도별 사업 실시 현황	91
<표 10> 국회 및 지방의회 인턴교육 사업 실시 현황	91
<표 11>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정치자금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	2·2
<표 12>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기준	32

I. 서론

지난 5월 31일 제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가 지니는 특징으로는 첫째, 주요 정책쟁점이 적었던 선거였다는 점,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었다는 점, 셋째, 매니페스트가 처음 도입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 유급제가 도입되는 등 종전의 지방선거와 달리 많은 제도적 개선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언론사를 통해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후보자 홍보 광고가 가능해졌다는 점, 따라서 예전 선거에서는 한정된 유권자들에게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였다는 점, ② 우리나라 선거권이 처음으로 19세로 낮아졌다는 점, ③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투표권 부여하였다는 점, ④ 1인당 6개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는 점, 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유급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⑥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고,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는 점, ⑦ 기초의원선거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하였다는 점, ⑧ 예비후보자 등록 및 사전선거운동이 허용(광역단체장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120일, 기초단체장 및 광역,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되었다는 점, ⑨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는 점, ⑩ 후보자의 공약사항 등을 담은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두 가지의 선거홍보물이 매세대에 배달되었으나 이번부터는 선거공보 한 가지에 후보자에 관한 모든 것을 게재하여 매세대에 배달되었다는 점, ⑪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 연설회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당들도 지방정치를 생활정치로 인식하여 지난 2002년 지방선거보다 보다 많은 여성들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에 공천하였다. 2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온 여성후보 수는 광역자치단체장 4명(당선 0명 <0.0%>), 기초자치단체장 23명(당선 3명 <1.3%>), 광역의회 “지역구 107명(당선 31명), 비례대표 136명(당선 57명)<전체 당선 합 12.0%>”, 기초의회 “지역구 391명(107명), 비례대표 750명(당선 327명)<전체 당선 합 15.0%>”로 200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간 늘어났으나, 그간의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속도와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실제, 2002년도 여성당선자 비율은 3.2%로 2006년도 지방선거와 동급비교할 경우 5.7%로 약간 증가한 정도이다. 특히 지역구의 여성대표성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 노력과 함께 지역구에 여성대표성을 강화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5. 31 지방선거와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주요 정당, 정부, 여성단체들의 지원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정치 참여확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2006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1. 2006 지방선거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현황

2006년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후보는 1,411명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에 4명, 기초단체장 후보에 23명, 광역의회에 243명, 기초의회에 1,141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1.5%를 차지하였다<표 1>. 여성 당선자는 광역단체장에 한명도 없는 가운데 기초단체장에 3명(1.3%), 광역의회 88명(12.0%), 기초의회 434명(15.0%)으로 나타났다<표 2>.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에 9.2%, 기초의회에 2.2%인 것과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이나 여성후보가 많이 출마하면서 여성당선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지역구 당선 의원비율은 각각 광역의회 4.7%, 기초의회 4.3%,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광역의회 73.1%, 기초의회 87.2%로, 대부분의 여성의원이 비례대표를 통해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표 1> 2006 지방선거 여성 후보자 현황

단위: 명(%)

		후보자수					
		전체			여성		
		합계	지역구	비례	합계	지역구	비례
전국	광역단체장	66	-	-	4 (6.1)	-	-
	기초단체장	848	-	-	23 (2.7)	-	-
	광역의회	2,279	2,068	211	243 (10.7)	107 (5.2)	136 (64.5)
	기초의회	9,020	7,995	1,025	1,141 (12.6)	391 (4.9)	750 (73.2)
	전체	12,213			1,411 (11.5)		

<표 2> 2006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현황

단위: 명(%)

		당선자수					
		전체			여성		
		합계	지역구	비례	합계	지역구	비례
전국	광역단체장	16	-	-	0 (0.0)	-	-
	기초단체장	230	-	-	3 (1.3)	-	-
	광역의회	733	655	78	88 (12.0)	31 (4.7)	57 (73.1)
	기초의회	2,888	2,513	375	434 (15.0)	107 (4.3)	327 (87.2)

2. 여성후보의 당선율

지역구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은 원인은 여성후보의 비율이 지역구에서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5%대 전후에 불과한 데에서 오는 결과이기도 하였다<표 1>. 그러나 <표 3>에서와 같이 여성당선율을 놓고 보면, 광역의회 지역구에서 28.9%, 기초의회 지역구에서 27.4%로 지역구에서의 여성당선율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도 지방선거의 지역구 여성당선율과 비교해 볼 때<표 4>, 광역의원은 25.0%, 기초의원은 34.7%로서, 광역의원의 경우 3.9% 상승하였으나 기초의원의 경우 7.3%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역의원의 경우 이번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만이 당선된 가운데 정당별 지역에서의 당선결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각 정당이 비교적 당선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선거 때보다 후보자의 수는 두배정도 증가하였으나, 당선율에 있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볼 때<표 4>, 전체 의석수 대비 여성당선율이 2002년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에서 각각 2.3%, 2.2%였던 데 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 4.7%, 4.3%로 미약한 수치이나 두 배가량 지역구에서의 여성당선율이 증가하였으며, 기초의회에 새로 도입된 정당공천제를 통한 비례대표제의 효과로 여성의원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 2006 지방선거 여성후보자의 당선율

단위: 명(%)

		당선율					
		여성후보자			여성당선자		
		합계	지역구	비례	합계	지역구	비례
전국	광역단체장	4	-	-	0 (0.0)	-	-
	기초단체장	23	-	-	3 (13.0)	-	-
	광역의회	243	107	136	88 (36.2)	31 (28.9)	57 (41.9)
	기초의회	1,141	391	750	434 (38.0)	107 (27.4)	327 (43.6)

<표 4> 1995·1998·2002 지방선거의 여성후보 및 당선자 현황

*()는 당선율

항목		1995년 지방선거				1998년 지방선거				2002년 지방선거			
		전체	여성 출마자	여성 당선자	비율	전체	여성 출마자	여성 당선자	비율	전체	여성 출마자	여성 당선자	비율
기초의회		4,541	206	71 (34.4)	1.56	3,490	140	56 (40.)	1.6	3,488	222	77 (34.7)	2.2
광역 의회	지역구	875	40	13 (32.5)	1.49	616	37	14 (37.8)	2.2	609	56	14 (25.)	2.29
	비례	97	79	42	43.2	74	54	27	36.4	73	116	49	67.1
	전체	972	119	55	5.8	690	91	41	5.9	682	172	63	9.2
기초단체장		230	4	1	0.43	232	8	0	0	233	8*	2	0.8
광역단체장		15	2	0	0	16	0	0	0	16	0	0	0
합계		5,758	331	127	2.3	4,428	239	97	2.32	4,419	402	142	3.2

* 2002년 지방선거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4명이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의 여성후보 2명이 부산에서 당선되었다.

3. 정당별 여성당선자 현황

다음으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여성후보자와 당선자를 정당별로 구분해 보았다. 광역의회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 22명의 후보를 공천하였으나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비례에서 35명을 공천하여 15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에 33명을 공천하여 29명이 당선되었고, 비례에 42명을 공천하여 23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 10명을 공천하였으나 1명이 당선되고, 비례에 19명 후보 중 7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 16명을 공천하였으나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비례에 26명 후보 중 10명이 당선되었다. 국민중심당은 지역구에 2명의 후보를 공천하여 한명이 당선되고 비례에 14명 중 2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무소속으로 23명이 출마하였으나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표 5> 주요정당의 2006 지방의회 여성 공천자 및 당선자 현황

단위: 명(%)

	여성 공천자수					여성 당선자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합계	광역의원		기초의원		합계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지역구	비례	
열린우리당	22	35	53	241	351	0 (0.0)	15 (42.9)	21 (39.6)	86 (35.7)	122 (34.8)
한나라당	33	42	90	308	473	29 (87.9)	23 (54.8)	61 (67.8)	188 (61.0)	301 (63.6)
민주당	10	19	25	71	125	1 (10.0)	7 (36.8)	7 (28.0)	30 (42.3)	45 (36.0)
민주노동당	16	26	126	107	275	0 (0.0)	10 (38.5)	15 (11.9)	14 (13.1)	39 (14.2)
국민중심당/ 희망사회당	3	14	4	23	44	1 (33.3)	2 (14.3)	0 (0.0)	9 (39.1)	12 (27.3)
무소속	23	-	92	-	115	0 (0.0)	-	3 (3.3)	-	3 (2.6)
미확인		-	1	-	1		-		-	-
총계	107	136	391	750	1,384	31 (28.9)	57 (41.9)	107 (27.4)	327 (43.6)	522 (37.7)

기초의회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에 53명을 공천하여 21명이 당선되고 비례에 241명 중 86명이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에 90명을 공천하여 61명이 당선되고

비례에 308명 중 188명이 당선되었으며, 민주당은 지역구에 25명을 공천하여 7명이 당선되었고 비례에 71명 중 30명이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에 126명을 공천하여 15명이 당선되고 비례에 107명 중 14명이 당선되었다. 국민중심당은 지역구 4명을 공천하였으나 한명도 당선되지 못하였고, 비례에 23명 중 9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무소속으로 92명이 출마하여 3명이 당선되었다.

특이한 점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기초의회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많은 여성후보가 출마하였다는 점이며, 정당 가운데 지역구에 가장 많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그러나 기초의회에 여성후보가 88.7% 몰리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4. 주요정당의 16개 시도별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현황

각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의 16개 시도별 분포를 보면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경기지역, 기초의회의 경우는 서울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성후보가 출마하였으며, 광역시를 중심으로 많은 후보가 출마하였다.

먼저 광역의회의 정당별 지역구 후보자를 보면<표 6>, 열린우리당은 서울, 경기지역,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대구지역, 민주당은 경기, 민주노동당은 부산, 경기 지역에 비교적 많은 후보를 공천했으며, 한나라당은 후보를 공천한 지역에서 거의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광역의회 비례대표 당선자의 정당별 지역현황을 보면<표 6-1>, 각 정당에서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의 당선현황을 나타냈다.

<표 6> 정당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단위: 명

지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무소속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7	0	7	7	1	0	1	0	0	0	6	0	22	7
부산	0	0	2	2	0	0	4	0	0	0	1	0	7	2
대구	0	0	3	3	0	0	0	0	0	0	2	0	5	3
인천	2	0	1	1	0	0	2	0	0	0	0	0	5	1
광주	1	0	2	0	1	1	1	0	0	0	1	0	6	1
대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울산	1	0	2	2	0	0	2	0	0	0	2	0	7	2
경기	7	0	10	10	5	0	3	0	1	0	5	0	31	10
강원	0	0	1	0	0	0	0	0	0	0	2	0	3	0
충북	1	0	1	1	0	0	1	0	1	0	0	0	4	1
충남	3	0	0	0	0	0	0	0	1	1	0	0	4	1
전북	0	0	1	0	0	0	0	0	0	0	0	0	1	0
전남	0	0	0	0	0	0	1	0	0	0	1	0	2	0
경북	0	0	1	1	0	0	0	0	0	0	2	0	3	1
경남	0	0	2	2	0	0	1	0	0	0	0	0	3	2
제주	0	0	0	0	3	0	0	0	0	0	1	0	4	0
전체	22	0	33	29	10	1	16	0	3	1	23	0	107	31

<표 6-1> 정당별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단위: 명

지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5	1	5	3	3	1	3	1	4	0	20	6
부산	1	1	2	2	1	0	1	1	0	0	5	4
대구	2	1	2	1	0	0	1	0	1	0	6	2
인천	1	1	2	1	1	0	2	0	1	0	7	2
광주	2	1	1	0	2	1	1	0	1	0	7	2
대전	3	1	3	1	0	0	1	0	1	1	8	3
울산	1	0	2	1	0	0	1	1	0	0	4	2
경기	5	1	6	4	3	1	3	1	2	0	19	7
강원	1	1	3	2	0	0	2	1	0	0	6	4
충북	2	1	2	1	0	0	1	0	1	0	6	2
충남	2	1	2	1	0	0	1	0	2	1	7	3
전북	2	1	2	0	2	1	2	1	0	0	8	3
전남	2	1	1	0	4	2	2	1	0	0	9	4
경북	1	1	3	2	1	0	1	1	1	0	7	4
경남	2	1	3	2	0	0	2	1	0	0	7	4
제주	3	1	3	2	2	1	2	1	0	0	10	5
전체	35	15	42	23	19	7	26	10	14	2	136	57

다음 기초의회에 정당별 후보자를 많이 공천한 지역을 보면<표 7>, 열린우리당은 서울, 경기, 부산, 광주지역에, 한나라당은 서울, 경기, 부산, 경북, 대구지역에, 민주당은 광주, 경기, 서울지역, 민주노동당은 경기, 서울, 부산, 전북지역에 많은 후보를 공천하였다. 정당별 당선자 지역현황으로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서울, 경기, 한나라당은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북, 민주당은 광주, 민주노동당은 경기, 울산지역에서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였다.

각 정당이 여성후보자에 대해 전략공천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당별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여성후보를 공천한 것으로 보이며, 당선결과에서도 정당별 지역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및 당선자에 대한 정당별 지역현황을 보면<표 7-1>, 열린우리당의 경우 서울, 경기, 전북, 전남지역에 많은 후보가 공천되었고 같은 지역에서 많은 당선자가 선출되었다. 한나라당은 전국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광주, 전남, 제주에서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북, 전남, 광주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은 경기, 경남, 전북, 울산지역 등에서 많은 후보를 공천하고 당선자를 냈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에서 특히 기초의회 비례대표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번선거에서도 역시 정당별 지역 지지기반이 상이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표 7>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단위: 명

지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무소속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9	6	33	22	5	2	24	1	0	0	22	1	93	32
부산	6	1	11	10	0	0	11	0	0	0	8	0	36	11
대구	1	0	6	6	0	0	3	0	0	0	6	0	16	6
인천	3	2	3	1	2	0	4	1	1	0	1	0	14	4
광주	5	1	0	0	8	5	3	3	0	0	4	0	20	9
대전	1	1	4	3	0	0	1	0	1	0	3	0	10	4
울산	0	0	0	0	0	0	5	4	0	0	2	1	7	5
경기	9	5	14	9	6	0	45	4	0	0	15	0	89	18
강원	7	1	4	2	0	0	1	0	0	0	4	0	16	3
충북	2	0	3	1	0	0	3	0	0	0	6	0	14	1
충남	2	1	2	0	0	0	2	0	2	0	1	0	9	1
전북	4	2	0	0	4	0	9	0	1	0	2	0	20	2
전남	2	0	0	0	0	0	4	1	0	0	7	1	13	2
경북	2	1	7	6	0	0	4	0	0	0	4	0	17	7
경남	0	0	3	1	0	0	7	1	0	0	7	0	17	2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체	53	21	90	61	25	7	126	15	5	0	92	3	391	107

<표 7-1> 기초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단위: 명

지역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기타		합계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후보	당선
서울	38	23	44	24	15	2	22	0	0	0	119	49
부산	12	7	25	16	0	0	9	0	0	0	46	23
대구	6	1	11	10	0	0	2	0	1	0	20	11
인천	9	5	13	8	3	0	5	0	0	0	30	13
광주	0	4	0	0	6	5	5	0	0	0	21	9
대전	6	3	5	3	0	0	3	0	2	0	16	6
울산	4	0	5	4	0	0	4	2	0	0	13	6
경기	33	13	51	32	5	0	13	2	1	0	103	47
강원	15	2	30	21	1	0	3	0	0	0	49	23
충북	12	4	14	12	0	0	3	0	2	0	31	16
충남	17	2	16	9	0	0	2	0	16	9	51	20
전북	26	10	3	0	14	9	8	3	0	0	51	22
전남	21	6	0	0	26	14	8	0	0	0	55	20
경북	11	2	46	26	1	0	7	1	1	0	66	29
경남	17	4	44	23	0	0	12	6	1	0	74	33
제주	-	-	-	-	-	-	-	-	-	-	-	-
미확인	1	-	1	-	1	-	1	-	1	-	5	-
전체	238	86	308	188	72	30	107	14	25	9	750	327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2002년 선거보다 여성후보자가 수적으로 증가했으나, 각 정당은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30%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의 비율은 5.2%,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의 비율은 4.9%에 머물렀다. 여성당선자는 2002년 선거때 광역의회 지역구 14명에서 이번선거때 31명, 기초의회 지역구 77명에서 107명으로 조금 증가했을 뿐이다. 다만, 이번선거에서 새로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체적인 여성의원의 비율이 높아졌다. 한편, 무소속 후보자가 광역의회 23명, 기초의회 92명으로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출마하였으나 거의 당선되지 못하였다. 이번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 도입과 더불어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는데, 향후 여성후보의 선거운동과 당선가능성을 놓고 볼때 중선거구제의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5. 2006년 지방선거와 선거제도의 변화내용

이번 5.31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는 선거제도의 변화가 하나의 큰 특징이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여성후보자들의 지방의회 참여확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가 관심사로 된다.

2005.8.4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정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선거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보완하고,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며, 대담토론회 실시 대상 선거를 확대하고 토론회 참여를 강제함으로써 정책선거 구현에 기여하는 등 새로운 선거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선거제도의 변화 중 기초의회 여성참여 확대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유급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중선거구제 도입은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둘째, 정당공천제는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한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는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비례대표제를 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여성후보자추천제를 도입하여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한 것이다.

넷째, 유급제 도입은 그간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등 실비만 지급함으로써 무급제였던 것을, 연봉을 지급함으로써 유급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상의 4가지 제도의 도입은 여성의 기초의회 참여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도입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우선, 중선거구제는 그동안 시·군·구의원선거에서 선거구당 1인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다수정당의 남성의원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고, 여성후보에 대한 선택이 어려웠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여성후보들의 출마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2- 4인을 선출함으로써 여성후보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표 8> 2006 기초의회 선거구 현황

단위: 개(%)

선거구 구분	획정위안	조례확정
2인선거구	366(40.4)	607(59.1)
3인선거구	379(41.8)	381(37.1)
4인선거구	161(17.8)	39(3.8)
전 체	906(100.0)	1,027(100.)

출처: 행정자치부

또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여성후보자를 50%이상 추천하도록 한 것과 홀수 순위를 여성으로 하도록 한 것은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선거결과 비례대표제 당선자에 여성비율이 높은 것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이와 함께 유급제의 도입은 전문성을 가진 여성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초의원의 연봉수준은 각 시·군·구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기초의원 연봉책정액은 평균 2,766만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자 230명 중 221명(96.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시·군·구별로 결정된 기초의원의 연봉수준’에 대해 66.5%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6.9%가 지역 재정을 고려할 때 ‘기초의원 연봉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다’고 답변했다.(조선일보, 2006.6.12) 또한 ‘연봉이 적으면 젊거나 유능한 인물이 출마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9.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급제의 도입은 유능한 인물의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선거제도의 변화가 여성후보에 가지는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III.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정당, 정부,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 활동

1. 정당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4차 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광역의회 의원 733명(지역구 655명, 비례 78명), 기초의회 의원 2,888명(지역구 2,513명, 비례 375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여성후보는 광역자치단체장 전체후보 66명 중 4명, 기초자치단체장 전체후보 848명 중 23명, 광역의원 전체후보 2,068명 중 107명, 기초의원 전체후보 7,995명 중 391명, 광역의원 비례대표 전체후보 211명 중 136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전체후보 1,025명 중 750명 등 총 12,213 전체후보들 중 1,411명으로 11.6%에 이른다. 제4차 동시지방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여성공천 방법과 심사자격을 마련하고, 시도당이 중심이 되어 공천작업을 마친 후, 선거에 임하였다.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경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공천방향을 정하였고, 한나라당은 경선보다는 여론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공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후 여성을 공천하였고, 선거에 임하였다. 민주당은 비례대표제 홀수 여성 배치 및 여성후보 지역구 30%이상 목표, 경선결과 25% 가산점 시행 등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성명부 분리작성 및 투표, 지역구 20%이상 공천을 원칙으로, 30%이상 공천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주요정당을 중심으로 제4차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후보 지원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후보는 1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230명 중 여성후보 7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 521명 중 여성후보는 22명, 기초의원 후보 1,303명 중 여성후보 53명, 광역비례 후보 58명 중 35명, 기초비례 후보 308명 중 241명을 각각 확정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기초의원만이 21명 당선되었으며, 광역비례 15명, 기초비례 86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열린우리당에 출마 의향이 있는 여성은, 기간당원이 아니더라도 한 달 이전에만 입당을 하면 공천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입당한 경우, 특별히 시도당 상무위원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였다. 대략 2월 중순 정도까지 입당을 하면 공천 신청이 가능하였으며, 경선은 3월말 이후 실시되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와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와 같이 공천과 관련된 주요 기구에 여성이 30% 이상 들어가야

했으며, 여성의 경우 경선 시 득표수의 20% 가산점이 있었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 심사를 하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사실상 공천심사위원회나 다름없었다)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할지, 경선을 할지, 전략공천을 할지 결정을 하였다. 비례대표제 1번과 50%이상 여성공천, 여성후보자가 4위의 점수를 받은 심사결과가 나왔을 경우 3인의 경선후보자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중앙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여성 30%이상 포함, 광역 및 기초의회 지역구에 여성 30%이상 공천, 전략공천의 경우 전체 후보 중 30%를 주고, 이중 여성은 30%를 주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당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열린우리당 여성국은 제4차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여성만이 힘이다”란 주제의 홍보 이벤트사업과 함께 전략적 이슈 개발 및 여성정책 공약집 발간 및 설명회, 후보자 인지력 제고를 위한 여성후보 홍보물 발간, 지방선거 승리 기반 마련을 위한 여성후보자 대회 및 후보 지원, 지방자치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한 선거 지원을 하였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약 12억 정도 되는데, 이는 후보교육 등 사업비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선거시에는 선거보조금과 여성정치발전기금, 여성추천보조금중 일부를 여성후보 지원금으로 활용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장 여성후보의 경우 1억원,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 1천 3백만원, 광역의회 여성후보 700만원, 기초의회 여성후보 400만원을 주었다. 그리고, 광역의회 여성후보까지 홍보용 무료 ARS를 지원해주었고, 여성후보 지지도 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중 50%를 당에서 지원해 주었다. 그리고, 선거기간중 수도권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행복울동팀”을 조직하여, 여성후보를 지원해주었다. 선거후에는 다음 선거를 대비하여 시도별로 여성낙선거자 모임을 조직하여 훈련과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갈 예정에 있다.

2)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6명 중 여성후보는 1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197명 중 여성후보 5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광역의원 후보 565명 중 여성후보는 34명, 기초의원 후보 1,944명 중 여성후보 90명, 광역비례 후보 65명 중 42명, 기초비례 후보 430명 중 308명을 각각 확정하였다. 여성은 기초자치단체장 3명, 광역의원 29명, 기초의원이 61명 각각 당선되었으며, 광역비례 23명, 기초비례 188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한나라당은 3월 전국 시도당에서 후보자 공천을 시작하였으며, 후보자 모집 공고가 실시되었다. 한나라당 여성 후보 공천을 받으려면 적어도 3월 정도엔 월 2000원 이상 CMS로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해야 했다. 공천 후보자 심사는 2월에 구성된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 단수, 복수추천이 가능하였다. 단, 복수로 추천할 경우 후보면접, 토론회나 여

론조사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경선은 제한하고 있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까지는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인재 영입지역 즉 한나라당 전략지역에서는 중앙당이 결정하였다. 한나라당이 여성후보 지원과 관련하여 당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①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에 여성 50% 이상 공천과 홀수순번제 부여, ② 전략 공천의 경우 여성 후보를 30%이상 공천, ③ 중앙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이 30% 이상 포함, ④ 광역·기초의원 지역구에 여성 후보 30% 공천 등이었다. 이외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장(사무총장)에 요구한 사항으로는 ① 시·도별 기초단체장 후보에 1인 이상 여성후보 의무공천- 1인 이상 미공천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반드시 관철, ② 광역·기초의원에 있어 지역구 여성후보가 30%에 미달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는 반드시 전원(100%) 여성 공천, ③ 지역구 여성후보가 10% 미만인 시·도는 여성으로 전략공천 10% 반드시 관철- 별도 공모 통해서 유능하고 합당한 여성후보 발굴 및 공천, ④ 현역 비례 여성 광역의원이 상급 단위 선거나 동일 선거의 지역구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공천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여성후보를 지원한 내용으로는 정당이 받은 여성추천보조금 약 7억6천8백만원을 여성후보지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점, 여성의원들이 여성후보 지원을 위한 유세장에 다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민주당

민주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8명 중 여성후보가 없었고,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90명 중 여성후보는 1명만을 최종 확정하였다. 광역의원 후보 235명 중 여성후보는 10명, 기초의원 후보 749명 중 여성후보 25명, 광역비례 후보 28명 중 19명, 기초비례 후보 124명 중 71명을 각각 확정하였다. 여성은 광역의원이 1명, 기초의원이 7명 각각 당선되었으며, 광역비례 7명, 기초비례 30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민주당에 가입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하고, 당원이 아니라 해도 중앙당의 심사를 거쳐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 인사영입특별위원회는 2월 28일까지 일반 국민과 네티즌들로부터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등을 추천 받는 등 명망 있는 당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는 3명(전체 13명)의 여성이 활동하고 있었다. 여성후보 공천관련 당헌조항으로는 전략공천 가능, 각급 공직선거에 30%이상 여성후보자 추천을 목표로 함,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에 50%이상 여성공천 및 홀수 순번 부여, 경선결과에 가산점 25% 시행 등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장상 선대위원장과 신낙균 부대표가 수도권에서 출마하는여성후보 광역의회 후보 6명과 기초의회 후보 12명을 대상으로 후보자대회에서 부터 출마후 선거진행과정까지 메토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리고, 중앙당차원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교육을 하여 전화

홍보를 도와주었고, 여성후보에게 기탁금 중 50%를 지원해주었다.

4)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13명 중 여성후보가 1명,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56명 중 여성후보 4명을 최종 확정하였다. 광역의원 후보 97명 중 여성후보는 16명, 기초의원 후보 467명 중 여성후보 126명을 각각 확정하였으며, 광역비례 후보 42명 중 26명, 기초비례 후보 127명 중 107명을 각각 확정하였다. 여성은 기초의원만이 15명 당선되었으며, 광역비례 10명, 기초비례 14명이 각각 당선되었다.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비당원 여성 후보에겐 가장 문이 좁았고, 당원 여성 후보에겐 가장 문이 넓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후보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였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낸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며, 지난 1년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당비 미납이 없어야 했다. 후보자 선출은 지역구나 비례대표제 모두 당원의 투표로 결정하였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일반명부와 여성후보명부를 만들어 선출하였고, 지역구의 경우 20% 여성후보 강제할당 및 30% 이상 여성후보를 할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한 결과 민주노동당 여성후보가 다른 당에 비하여 많이 공천되었다. 즉, 강제 할당제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여성후보를 30%이상 공천한 지역위원회의 여성후보에게는 약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나머지 지역의 여성후보에게 100만원씩 중앙당 차원에서 약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3-4인 나오는 선거구를 전략 선거구로 정하여 여성에게 우선 공천하도록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정치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교육(① 여성지도자학교 운영, ② 여성놀이문화학교 운영, ③ 광역 시도당 지방여성정치학교 운영, ④ 여성정치학교, ⑤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정치학교, ⑥ 지방선거 여성후보학교)과 지역정치활성화를 위한 지역여성정치활성화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성평등기획단 운영 및 성평등 의무교육 지원, 여성관련 정책개발비를 지원하였다. 결론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지역구 20% 강제할당제를 도입한 결과 여성당원중에서 후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였지만, 재정적인 어려움과 선거경험이 부족한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2.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1)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여성비율 30% 목표와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여성계는 2005년 11월 29일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공동대표단체: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를 전국의 73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활동한 바 있다. <여성행동>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여성정책 과제를 담은 ‘5. 31 지방선거, 11대 여성 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50%이상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 ② 학령기 아동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 ③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우리농수산물 사용·직영급식·무상급식 등 3대 원칙에 맞는 학교급식조례제정
- ④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빈곤 등 중첩된 차별을 고려해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춘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⑤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확충
- ⑥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폐쇄정책 실시 및 성매매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주거·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⑦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여성폭력방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
- ⑧ 지역별 가족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유형별로 요구되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부모·국제결혼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⑨ 빈곤 여성의 소득과 돌봄 노동 지원을 위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
- ⑪ 지방자치단체에 부자치단체장 1인을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

한편,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지난 6개월간 각 당의 대표 및 사무총장, 여성위원장 등을 만나 여성 공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각 당의 여성 공천 현황은 열린우리당 14.74%, 한나라당 14.92%, 민

주당 10.04%, 민주노동당 34.91% 등에 그치고 있다며 각 당 여성공천 결과 평가서를 공표했다. 이 수치는 비례대표 후보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비례대표를 제외하면 열린우리당 4.01%, 한나라당 4.74%, 민주당 3.15%, 민주노동당 23.2%에 그쳐 지방의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출직 후보 중 주요 4당의 여성후보자는 6.04%에 불과하다.

또한, 100여명의 여성계 인사, 여성유권자 참여한 가운데 5.3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개최하였고, 10대 서울시 여성정책 요구안 이 담긴 '생활자치 희망의 씨앗' 각 당 후보에게 전달하였으며, 5.31 지방선거 여성정책 11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성평등한 지방의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을 발간하였으며, 의견서 '정치개혁을 위한 지방자치 여성참여 확대방안' 및 5.31지방선거 각 당 비례대표 선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생활자치 맑은정치 여성행동은 지난 5월25일 명동에서 "여성이 바꾼다! 잘 찍자 여성이여!"라는 주제로 5.31 지방선거 여성유권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제는 여성이다! 생활자치 살려내자!' '돌봄정치, 맑은정치 여성이 해내자!' '연고정치, 부패정치 여성이 청산하자!' 등 성명서를 냈다.

2)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정치연맹에서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선거 여성후보자 교육을 실시했다. 주제는 ① 2006지방선거와 여성, ②개정 공직선거법 및 선거운동, -③열린우리당의 여성정책, ④한나라당의 여성정책, ⑤민주당의 여성정책, ⑥민주노동당의 여성정책, ⑦여성지방의원의 역할과 과제, ⑧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심의 기법, ⑨공약 및 정책개발과 방송토론 기법 등 이었다.

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지난 4월28일 시청 앞에서 부산, 경남 등 전국회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핑크파워 - 여성유권자대회'를 개최했다. 또한 행사당일 '2006 의정을 지키는 여성유권자의 모임' 출정식을 갖고 여성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는 의미로 청계천 변을 걷는 '핑크파워의 물결'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2006년 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선언문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를 냈으며,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의 낙선자와 당선자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2006 지방선거와 여성'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2005 전국여성단체 지도자연수를 4월 27,28일 남원에서 개최하였다. 2005년 전국여성단체 지도자연수가 전국 150여 명의 여성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구는 국력이다, 출산을 장려하자!", "2006년 지자체 선거, 여성의 몫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06년 4월3일 5당 대표와 여성위원장을 초청해 '지방선거와 여성' 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는 여성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주제로 5.31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각 당의 여성후보 공천 현황 및 지원 방안 등을 경청하고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5)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5.31 지방선거 여성단체장 후보 10% 공천을 위한 여성단체·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은 자치단체장 후보에 최소한 10% 이상 여성을 공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각 정당에서 여성단체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끝까지 주시하겠다고며, 여성 정치세력화의 원년이 될 이번 5.31 지방선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6)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냈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5yes! 5no! 유권자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006 5.31 지방선거 여성 유권자 선언문>, 각 당 여성공천 현황에 관한 여성행동 의견서, 각 정당 비례대표 선정에 관한 여성행동 의견서를 제시하였다. 여성후보자를 위한 「여성이 당선된다!」 선거지침서를 출판하였고, '여성이 똬다! 여성인 뜯다!' 주제로 2006 지방선거를 위한 여성후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3. 여성가족부의 여성후보 지원활동

2005년 UNDP가 발표한 인간개발지수를 살펴보면 인간개발지수(HDI)는 177개국 중 28위, 여성개발지수(GDI)는 140개국 중 27위를 차지하였으나, 여성권한척도(GEM)는

80개국 중 59위를 차지하여 그간 민주화 속도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하여 여성권한척도는 낮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업무보고에서 여성권한척도(GEM)를 2007년까지 30위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¹⁾ 이와 관련하여 여성부가 그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치대학 사업으로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매뉴얼을 기본으로 시·도별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참가자 편의를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 형태로 실시하고 있다.

<표 9> 여성정치대학 연도별 사업 실시 현황

연도별	실시개요	교육인원	지원금액(만원)
2002	○ 14개 시·도(경남,제주 제외)	629명	○ 7,000만원(시도당 500만원)
2003	○ 15개 시·도(경남 제외)	696명	○ 9,000만원(시도당 600만원)
2004	○ 16개 시·도	665명	○ 6,400만원(시도당 400만원)
2005	○ 15개 시·도(서울 제외)	500	○ 10,000만원
계		2,490	39,040만원(3억9천4십만원)

※ 차세대지도자육성사업으로 추진(2002~2004)

둘째, 국회 및 지방의회 인턴교육으로 2002년, 2003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게 위탁하여 실시(국회인턴)하였고, 2004년도 9개 시도(지방의회 인턴), 2005년 6개 시도(지방의회 인턴)에서 실시하였다.

<표 10> 국회 및 지방의회 인턴교육 사업 실시 현황

연도	실시개요	교육인원	지원금액(만원)	형태
2002년		80명	1,650만원	단위사업(민간지원)
2003년	“	79명	1,700만원	단위사업(민간지원)
2004년	9개 시도 (지방의회인턴)	196명	9,000만원	단위사업(지자체지원)
2005년	6개 시도 (지방의회인턴)	157명	6,000만원	단위사업(지자체지원)
계		512명	18,350만원 (1억8천3백5십만원)	

* 2004년 실시기관 : 1차(04.6~11.) :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남,
2차(04.9~12.) : 부산, 충남, 전북

* 2005년 실시기관 :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전남, 경남

1) 여성목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정치참여 12%, 행정관리직 10%, 전문기술직 40%, 남녀대비 소득비율 55%이다.

셋째,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1년에는 10개 단체에 9천3백만원을 지원해주었다. 2002년에는 19개 단체에 4억원을 지원해주었고, 2003년에는 12개 단체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2004년에는 12개 단체에 2억2천4백만원을 지원해주었다. 2005년에는 15개 단체에 2억 7천만원을, 2006년에는 11개 단체에 1억 7천 6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이외에도 2006년 지방선거를 맞아 여성가족부 역할 모색을 위한 간담회,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장하진 장관의 여당 대표 면담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부터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설치된 이후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치참여와 관련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정당에 설치되어 있는 여성정치발전기금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여성부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

이상으로 제4대 동시지방선거에의 여성진출 현황 및 정당, 정부, 여성단체의 지원활동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는 여성계가 목표로 한 30%에는 못미쳤으나,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여 많이 늘어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당들 나름대로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나라당의 경우로 시도지사 후보가 남성일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중 1명은 반드시 여성후보로 하도록 한다. 둘째, 열린우리당의 경우로 전략 공천 30%하며, 이중 30%를 여성 할당한다. 셋째, 지역구 공천 30% 불이행시 비례대표제 100%를 여성할당하도록 한다. 넷째, 민노당의 경우로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 20% 의무화하며, 30%이상일 경우 지역당 위원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등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당들의 여성정책은 일부만 지켜졌다는 점이다.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로 거듭나기 위하여 정당들은 끊임없이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분야를 남성영역으로 간주하는 성고정관념과 함께 민주정치나 정당정치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정치에 나서려는 여성의 수가 적었으며 또한 선거제도가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당선가능한 지역과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일정비율의 여성을 공천해 주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정당, 정부,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시되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 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정당의 역할

가. 지역구 강제할당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비율 확대

현재 정당법에 총선 및 광역, 기초의회선거의 경우 노력사항으로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을 명시하였고, 5%이상 여성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표 12참조>.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 20% 강제할당을 한 결과 여성후보가 증가한 것을 보았듯이, 현재 노력사항으로 되어있는 지역구 30% 여성공천할당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꾸고, 지역구 여성공천 30%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하여 프랑스식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의회 비례대표제 비율이 10% 수준인데, 앞으로 정책정당의 실현을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가급적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여성은 50%이상 공천하고, 홀수번에 반드시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접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정치자금과 관련된 선거법 조항

구 분	조 항	내 용
공직참여 확대	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제4항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2호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여성후보자의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선무효에 해당된다.
여성정책 개 발 및 정치 참여와 관련 한 제도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을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며, 10%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제28 조제3항:	<u>여성추천보조금</u> 은 정당추천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한다

<표 12>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 기준

구 분	내 용
1.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 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나.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2.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나.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가목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전략 공천 확대

현재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후보 선출에 있어 경선을 하는 경향이 컸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역구 여성할당 20%를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는 여성들의 경우 아직 신인이 많은 상황에서 20-25%의 가점을 주어도 기본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후보 발굴차원에서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내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경선을 통하여 여성이 지역에 출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후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력 풀이 구성될 때까지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 공천관련위원회(예: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순위확정위원회)에 30%이상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17대 총선이후 각 정당들은 후보공천과 관련하여 총재가 낙점을 찍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일정비율 당내외 인사가 포함된 공천관련위원회(예: 상임위원회,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후보자 선정위원회, 공천순위확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자 일인만의 의중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공천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확대되었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일정 비율 여성위원의 참여시켜 공천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심사위원중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각급 선거의 공천관련위원회에 30%이상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에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라. 정당의 여성정치인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이행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목표 수립시 그간의 우리 실정과 각급 선거의 성격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국회 및 지방의회 선거에 40%이상(단계별로 2008년 20%이상, 2015년 30%이상, 2020년까지 40%이상)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여성지원계획 수립하고 당헌·당규에 이의 의무를 명시화하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은 각 당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고민으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예로 열린우리당은 낙선된 여성후보 중심의 모임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노력하고 있는데, 여성정치인 풀구성을 위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마. 여성후보에 대한 멘토시스템 도입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여성후보를 위한 멘토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는 이미 스웨덴에서 여성공직자들에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써 멘토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소에 해야 하는 일과 선거과정에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하여 함께 경험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바. 여성의 당직활동 확대

한국여성개발원이 2003년 연구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를 보면, 15대, 16대 국회의원 중 당선된 사람 중 과반수가 초선이었고, 이들의 직업은 대체적으로 정치/정당인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받는 일이 다른 직업에 비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²⁾ 반면, 여성들의 경우 지구당에서 비중의 정도가 적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앙당차원의 당직을 맡는다 해도 형식적 수준으로 비중이 낮은 당직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2) 김원홍·김민정·이현출·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pp.7-16.

러다 보니 여성들은 공천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컸고, 그것이 현실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정당에서 여성들이 자기발전을 하는데 한계를 가지면서, 주요 당무나 국정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고, 또한 공직 선거 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정당들은 주요 당직자에 일정비율 여성을 포함시키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사. 선거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에 포함 여성후보의 선거비용 지원

정부는 매년 정당에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간 여성들이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돈과 조직의 부족’과 ‘정당의 지원부족’ 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어떤 정당도 여성후보육성 및 선거지원을 위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다,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매년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중 경상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인 육성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1년에 4번, 선거보조금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 추천이 가능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고 있다. 2005년 각 당에 지급한 여성정치발전기금은 28억원 인데, 이중 열린우리당은 약 11억 9천만원, 한나라당의 경우 14억 5천만원, 민주당의 경우 2억원, 민주노동당의 경우 2억 3천만원, 자민련은 7천8백만원 등이다. 주요 정당들은 여성정치발전기금의 용도를 교육훈련비와 여성조직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 추천이 가능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중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확보하여 선거시 여성후보의 경선 및 공탁금, 선거지원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 남녀당직자 대상 양성평등의식 교육 실시

2005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연구한 결과 지방의회 남성의원들은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식이 낮게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응답자중 남성의원의 경우 82.9%, 여성의원의 경우 93.1%가 양성평등교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반드시

정책에 대한 성 분석 교육과 양성평등의식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성 인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여성가족부의 역할

현재 여성부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지방과 여성단체를 통하여 여성후보,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민관협력사업 정도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가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중 10%를 정당의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이 여성후보 지원을 위하여 하는 역할과 정부가 하는 역할을 확연히 차이가 있다. 아직, 정치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강한 상태에서 여성부는 유권자의식 개선 및 선거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규모의 정기적인 유권자 의식조사도 필요하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다음과 같이 여성부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당정협의를 통한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각 부처별로 장관과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함께 현안 문제를 다루는 부처별 당정협의회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제2항(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에서 당·정협의권을 강화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정당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여성단체 등 지원책 마련

1) 각 정당에 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책 마련 촉구

여성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당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계획, 목표를 설정 및 할당제 도입, 여성후보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강화, 여성후보자 선거지원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당의 대표에 촉구한다.

2) 여성후보자 발굴과 차세대여성지도자 육성, 유권자 의식교육을 위한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 지원

여성부는 여성단체가 집중적으로 유권자 의식교육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후보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와 관련 지역의 여성연구소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3. 여성단체의 역할

17대 총선 이후 여성단체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연대하여 후보자 발굴 및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왔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예: 지역구 할당제를 의무조항으로 바꾸면서, 비례대표제 비율을 지역구의 50%까지 확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비율 여성공천 할당, 여성정치발전기금의 확대 및 운영활성화 등), 둘째, 한 단체에서 일정 수의 여성후보 발굴 및 선거운동까지 지지해주는 멘터시스템의 도입(예: 일본의 생활자네트워크처럼 여성후보 발굴 및 피라미드식 선거운동 지원)이다. 셋째,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유권자 의식교육의 강화, 넷째, 공명선거 및 의정감시 활동, 다섯째, 언론과의 연계를 통하여 여성후보 홍보활동 강화, 여섯째, 유권자 투표 참여하기 운동의 전개 등을 들 수 있겠다. 그 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및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여성단체들의 역할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자치가 ‘풀뿌리정치, 생활정치’로 거듭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더욱이 20세기의 사회가 냉전체제의 산물로서 군사력과 국가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회였다면, 21세기의 고도 산업화, 정보화, 지방화사회에서는 집단과 집단, 지방과 지방, 국가와 국가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인본주의적이며 평화지향적인 부드럽고, 친화력이 강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정치적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부터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성숙된 지방화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21세기의 우리사회는 통일된 세계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김민정, 이현출, 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 이인숙 · 권이완(2005), 「오늘의 여성학(개정증보판)」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여성부 협력지원팀 제공자료.

여성단체 홈페이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여성국 담당자 인터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외국사례>

1. 프랑스

가. 프랑스는 2000년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각급 선거에서 50%의 후보에 여성을 공천하는 것을 의무화한 국가이다. 이에 따라서 2002년에 있었던 중앙의회 선거에서도 50%의 여성후보를 공천해야만했다. 프랑스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서 지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에 유리하다. 따라서 정당에서 공천할 때는 지역에서 얼마나 당선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천이 이루어지며 이런 점에서 지방의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공천에서 유리하다. 더구나 프랑스의 지방의회는 모두 3종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여성들에 제공하고 또 지방의회 경험이 길기 때문에 지방의회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있다.

나. 프랑스 정당들의 공천방식은 정당들마다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우파 정당들은 위로부터 하향식의 방식으로 공천을 하는 반면, 사회당은 지구당별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후자의 사회당의 경우에도 당지도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경선을 통해서 결정된 후보들 가운데 공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당지도부는 가진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동수추천제를 사회당에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2. 스웨덴

가. 스웨덴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비율도 높고 중앙의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50%에 가깝다. 스웨덴은 오랜 세월동안 정당정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정당들의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프랑스와는 달리 지역적인 연고를 가진 후보를 공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스웨덴의 정당들은 정당에서의 활동이 공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당활동을 쌓아온 후보가 공천에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정당의 공천방식은 각 정당별로 차이가 있다. 후보들의 순위를 결정할 때 비사회당 계열의 정당들은 주로 당원들만 참여하는 당예비선거에서 결정한다. 반면 사회당계열의 정당들에서는 지역공천위원회와 선거구집행부가 순위결정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모든 정당들에서 명부채택은 전당대회에서 이루어진다. 명부에 들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은 정치적 자격이다.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지방의회의 경험이다. 지방의회출신들에게 정당에서 특별한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정당명부 작성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정당내 활동이기 때문에 지방정치에서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정당내 활동의 기초를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지방에 기반을 둔 많은 여성들이 중앙의회에 공천을 받고 있다.

3. 영국

가. 영국은 우리와 같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국가인데다가 특히 중앙당에서 공천을 결정할 때 지구당에서 작성하는 예비리스트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이다. 영국에서 하원의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지구당내 당원들끼리 경선 내지 후보추대를 거쳐 선발된 후, 몇 단계의 심사를 거쳐 후보로 결정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 여성후보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협력관계가 원활한데서 이루어지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영국은 정당정치의 역사가 긴 나라이면서,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당의 경우 지구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앙당의 기본지침과 중앙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천제 정책을 전개해왔다. 중앙당에는 후보 선출위원회(인구 5-6만의 선거구의 경우 50-60명의 위원으로 구성)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지구당에서 보내온 5명의 경선 후보자를 심사한다.

나. 영국의 경우, 하원으로 진출한 여성의원들 중에서 지방의원 또는 지방의원을 거쳐 단체장을 경험한 후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경우 어느 정도 의원후보 선출에 있어 당내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의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선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는 선거경험이 있고, 또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선거구민들과의 득표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대만

가. 입법원은 대만의 의회이며, 여성의원 참여율은 약 20%이다. 대만은 중·대 선거구이기 때문에 한 선거구에서 5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할당조항이 입법원 선거의 경우, 매 5인 이상 10인이 당선되는 지역구마다 적어도 여성이 1명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의석이 10석이 넘을 경우, 각 선거구당 매 10석마다 1석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다. 대만에는 헌법과 당헌에 모두 부녀보장제도(婦女保障制度, Quota for women) 또는 보장의석수(保障議席數, Reserved seats) 조항이 있다.

나. 대북시(臺北市, Taipei) · 고웅시(高雄市, Kaohsiung)

대북시는 대만의 수도이며, 고웅시는 규모면에 있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2001년 현재, 대북시 여성의원 비율은 약 30%, 고웅시 여성의원 비율은 약 12%이다. 이 두 도시의 여성할당조항은 7인 이상의 선거구일 경우, 각 선거구에 매 7석마다 여성을 한 명씩 할당한다는 조항이 있다.

다. 현 · 시의회(縣 · 市議會, County · City Magistrate)

지방자치법이 개정(1997년)되기 전에는 한 선거구가 10인 이상 선거구일 경우, 매 당선되는 10석마다 1석을 여성에게 할당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1998년 이후에는 매 4석마다 여성이 한 명 포함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 변경된 조항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첫 번째로 적용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출처>: 김원홍, 김혜영, 김은경(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원홍, 김민정, 이현출, 김혜영(2003),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국회 진출 활성화 방안」(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부 록